



참여민주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재(김종국박상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6-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전보번호: PSPD, 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과학부,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담당: 송영민: 723-5302)
제 목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출범식 및 창립총회
날 째 1997. 11. 22. (총 4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출범식 및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1997. 11. 22(토), 오후 3시-5시, 참여사회아카데미 강당

1.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대표 金煥錫, 국민대 교수/과학기술사회학)은 11월 22일 (토) 오후 3시 안국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창립총회를 했다.
2. 이 모임은 과학기술의 산업적, 군사적 발전으로 초래된 환경, 평화, 안전, 윤리 문제 등에 주목하고 이는 과학기술에 관한 의사결정이 기득권층에 의해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민주화와 공공책임성의 확보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취지에서 결성되었다.
3. 이를 위해 이 모임은 창립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1) 제도연구사업: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감시 및 비판적 분석, 다양한 시민참여의 방안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과학상점, 참여설계, 신기술협약 등) 강구 및 보급, 시민토론회 개최 등
 - 2) 국제협력사업: 미국과 유럽의 과학기술 시민운동단체들(예: Loka Institut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등) 및 민주적 과학기술정책 기구들(Danish Board of Technology, Rathenau Institute 등)과 정보교류 및 국제 연대사업 추진 등
 - 3) 출판 및 교육사업: 과학기술 민주화관련 각종 홍보물 및 도서 출간, 과학기술 시민교육

‘참여연대’내 과학기술시민운동의 조직을 위한 취지문

최근 첨단 과학기술이 내포하는 위험과 사회적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운동의 비판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항의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16일에는 종로성당에서 복제양 “돌리” 사건으로 불거진 생명공학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비슷한 위험과 문제점이 핵발전소, 쓰레기소각장, 경부고속철도 등이 초래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에서 이미 현실화되어 우리 사회를 뒤흔든 바 있습니다. 뿐 입니까?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 대구 지하철공사장 사고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 광행 대한항공비행기 추락사건 등도 역시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의 기술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론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人災냐 아니냐” 등 과학기술의 이용구조에서의 잘못으로만 부각될 뿐, 정작 현존 과학기술의 성격과 그 개발구조가 지닌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은 좋고 선한 것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선진국이 되는 관건이므로 전폭 지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지상주의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와 생명공학도 이용만 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시스템의 도입이 그동안 시민들의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기업·과학부문 엘리트간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단지 이들이 결정한 정책의 홍보 대상이거나 기술시스템의 수동적 소비자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이나 정치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과학기술에서 시민은 무력하고 소외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연구의 자유와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과학기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시민의 감시나 의사반영이 불필요한 전문가의 특수영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아직도 민주주의보다는 종래의 엘리트적·관료주의적 의사결정이 마치 정당하고 최선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가 빅탈되다보니 경쟁력이나 이윤보다 복지, 환경, 윤리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의 가치관과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과학기술이 기존 사회구조에 의해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연구의 자유나 그 상업적 활용은 절대적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보기술·생명공학·핵기술처럼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시민의 세금이 중요한 후원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경우에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최근 서구에서 발전되고 있는 ‘기술적 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 개념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의 확보는 엘리트에 의한 통제로부터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 되어, 과학기술의 인간화를 촉진해줄 것입니다. 시민참여는 또한 잘못된 과학기술투자로 인한 환경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게 하므로, 근대화와 산업화가 초래한 ‘위험사회’에서 성찰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과학기술의 민주화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시민참여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과학상점(science shop), 참여설계(participatory design) 및 신기술

협약(new technology agreement)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혼히 엘리트들은 시민이 과학기술에 대해 본래 무관심하고 무능하다고 속단하지만 이를 제도의 성공적 운영이 그리한 사실을 부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들은 이러한 시민참여가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정부고속철도 등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사전에 시민의 평가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은 시민에게 친근한 것이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간의 거리가 좁혀질 뿐 아니라,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시민문화의 성숙이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처럼 '전문가' 이데올로기가 심한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북돋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선, 시민단체가 대안적 정보를 발전시키고 이를 시민과 언론에 제공하여 사회적 토론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의사결정과정에도 공익을 대표해 참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다른 사회문제(노동, 언론, 교육, 여성 등)와 구별되는 가치중립적·비정치적 영역이 결코 아니며 21세기로 갈수록 그 사회적 확산과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선택을 위한 시민운동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시민운동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정치적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운동은 이공계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과학기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학기술자운동'이나 '과학기술노동운동'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되었습니다. 또 과학기술운동에서 파생된 환경운동, 정보운동 등은 기술변화의 사후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어느 것도 '현존 과학기술의 근본적 궤도 수정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대안과학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보다 인간적이고 생태친화적인 대안적 과학기술의 구성을 그 위에서 궁극적으로 보다 평등한 대안적 사회질서를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 운동의 주체는 과학기술자나 기타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시민이 될 것이지만, 기존 과학기술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적 과학기술의 모색에 도움을 주는 비판적 과학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를 촉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과의 적극적 결합에 이 운동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운동단체중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사회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저희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의 한 부분으로서 이 운동을 조직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주도의 과학기술운동이 될 우리 모임의 주된 활동 영역에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제도연구 사업: 현행 과학기술관련 법과 정책의 분석 및 시민관점에서의 대안적 제도 연구
- 2) 언론·정보 사업: 대안적 정보의 개발, 홍보용 리플렛 및 각종 출간물 발간, 대언론 홍보활동
- 3) 시민교육 사업: 과학기술시민학교의 개설 및 운영, 시민교육 학습교재 개발
- 4) 국제협력 사업: 해외의 과학기술운동단체들과의 협력망 구성,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 5) 학생 특별사업: 학생회원의 조직, 교육 및 연대활동
- 6) 기관지 발간사업: 우리 모임의 시작과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관지 정기발간

위와 같은 취지에 공감하시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합니다.

1997년 11월 일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가칭) 임시대표 김환석

프로그램 운영 및 교재개발, 홍보활동 등

- 4) 학생사업: 대학생(학부, 대학원) 회원의 조직, 교육, 연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각종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 캠프, 과학기술 영화제 통신공간 활성화, 대학언론과의 연대 등을 추진.
- 5) 기관지사업: 기존 발간되던 <다른과학>을 과학기술시민운동의 대표적인 대중매체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청년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 회원 소식지 발간.

4. 이 모임의 필요성은 지난 7월 16일 종로성당에서 개최된 "생명공학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이후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8월 20일 1차 준비모임 이후 3개 월에 걸친 준비과정중에 과학기술 시민운동에 공감한 각계 전문가, 직장인, 학생들이 참여하여 이들을 주축으로 이번에 출범식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이필렬 교수(방송통신대/과학사), 김동광 대표(과학세대), 이종찬 교수(아주대 의사학), 박병상 소장(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최경희 교수(이대/과학교육학), 조현석 교수(서울산업대/행정학), 송해룡 교수(원광대/신문방송학), 임경순 교수(포항공대/교양학부), 강정인 교수(서강대/정치외교학), 곽일천 교수(경원대/지역개발학), 홍성욱 교수(University of Toronto), 김상현(영국 에딘버러대학), 이종구 교수(성공회대/사회학과), 김명운 교수(대진대/환경공학), 조순경 교수(이화여대/여성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는 송상용 교수(한림대/사학과), 박은정 교수(이화여대 법학과), 장희익 교수(서울대 물리학), 고철환 교수(서울대 해양학), 이성우(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별첨자료■

1. 취지문
2. 초대장(행사 프로그램)
3. 출범식 자료집(우편발송)